[토론회]

기후 비상사태, 노동조합운동의 대응

기후변화가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일로 경험되고 사회 취약집단의 피해와 경제적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후파업'과 '멸종저항'을 위시한 기후행동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50여개 단체 이상이 모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출범하여 한국 정부와 사회 각 부문의 심각한 인식과 비상사태에 걸맞는 행동을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오는 9월 21일 대규모 행동과 대정부 요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노동조합운동은 기후변화 이슈를 아직 자신의 주제나 과제로 받아안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ITUC(국제노총) 등 세계 노동조합운동의 움직임과 괴리가 있는 것일 뿐 아니라, 한국 노동조합도 기후변화라는 당면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입장과 전략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명목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로 접근하기 보다는, 노동조합 각 부문과 수준의 상황과 이해 위에서 기후위기를 자신의 과제와 실천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노동자의 기후행동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최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후원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사회공공연구원

시간 : 2019년 9월 5일 (목) 오후 3시-6시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13층)

사회 : 장영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발표 :
-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최근 논의와 실천 ("녹색 노동조합은 가능하다" 내용 소개 포함) /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한국 정의로운 전환의 쟁점: 에너지 부분을 중심으로 /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
- 한국 기후행동의 요구와 계획 / 고은영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획단)

토론 :
- 민주노총, 산별/부문, 연구자 + 참가자 자유토론

* 문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02-6404-8440),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구준모, 010-2050-1871)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최근 논의와 실천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환경주의자들과 노동자(노동조합) 사이의 관계
- 상호 불신과 의심, 공개적인 적개심
- 일자리와 생존, 환경 보전 사이의 대립 구도. 노동의 '타자'로서의 자연, 그러나 노동조합의 초창기에는 환경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가치와 활동이 이루어졌음
- 노동조합은 보건과 안전 문제가 작업장 내부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졌고, 오락과 여가의 공간으로서의 자연 또는 오염으로부터 보호돼야 할 환경이라는 이미지 속에 자연은 노동의 '타자'로 자리매김 됨
- 산업주의, 생산주의로 기울어진 노동조합의 전통

○ 노동과 환경을 결합시키는 이론적 노력들
- 오코너, 포스터, 하비, 페퍼, 게어, 머천트 등 생태마르크스주의 전통. 마르크스의 저작을 재발견하며 이론과 의제 연결
- 대표적인 주제는 '자본주의의 2차 모순'과 녹색 일자리
- 노동연구와 환경연구 사이의 다리 놓기

○ ITUC 등 국제 노동운동 대응의 발전
- 2006년 케냐 나이로비의 "노동과 환경에 관한 노동조합 총회"와 ITUC 창립 총회
- 폴란드 포즈난의 2008년 COP14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개입이 시작됨
- ITUC가 정의로운 전환 정책 채택과 발전. 2010년 2차 총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특별한 접근이라고 선언
- 시에라클럽과 전미철강노조(USW)의 블루그린동맹, 최근의 '그린뉴딜'
- 남아공의 Earthlife, COSATU와 NUMSA 협력 속에 백만 개의 기후일자리 캠페인
- 브라질 CUT, 환경개발 사회운동 포럼
- CCOO, WWF 스페인 지부, 옥스팜 스페인 지부, 소비자 그룹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기획을 촉진하기 위해 기후운동 Movimiento Clima를 창립. 전국 범위의 플랫폼인 '기후연합 Coalición Clima'으로 발전
- Sustainlabour와 국제 노동기구의 협력과 이니셔티브

○ 환경 노조주의의 기본 원칙들
- 인간 관계의 윤리적 가치들을 회복하고, 부유한 북반구와 빈곤한 남반구 사이의, 그리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 사이의 불평등하고 지속 불가능한 관계들의 해법을 요구하

기. 동시에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는 인간 이해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
- 환경에 관련해 노동자는 인간 생존의 물리적이고 생화학적인 기반인 생물권 보호에 초점을 둬야 한다. 이런 전략은 자연적 경계에 대한 전문 지식과 존중을 요청한다. 자연은 생명과 노동의 기반이다.
- 사회적인 것에 관련해 노동자는 안녕을 성취하고 사회 정의와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정치적으로, 환경 노조주의는 새로운 목표와 요구들을 가지고 사회적이고 반자본주의적 동맹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젖힌다.
- 노동에 관련해 환경적 실천의 발전은 직업적 위험 요소를 막고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적절한 환경 규제와 실천은 더 강력하고 좀 더 지속 가능한 형태의 조건을 보호하고 작동시키게 할 수 있다. 그런 규제들을 사용자들이 준수하게 함으로써 제재의 위험과 일자리 상실을 피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 요구사항들
- 에너지 모델 변화를 통해 탈탄소 경제의 발전이 가능하게 하기. 이런 요구는 산업 국가들의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고,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조치들을 시행하고,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원을 탈집중화된 재생 가능 에너지들의 생산으로 대체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새로운 이동 모델로 나아가는 방향 전환. 도시와 경제적 활동들은 교통의 필요성을 줄이며 승용차를 버리고 좀더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설계돼야 한다. 교통은 석유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이용해 전력화될 필요가 있다.
- 청정 생산으로 물질의 닫힌 순환(closed cycle)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 천연자원(물, 원료, 토양)의 이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관리를 통해 재생 가능성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실현
· 효율적인 생산 과정, 청정 기술과 노동 조직화로 자원의 최적화
· 최적화된 상품과 서비스의 이용, 폐기물과 배출의 제거 또는 감축, 비효율적 생산의 배제 등

○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
- '정의로운 전환'은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극적 훈련과 기술 개발 정책을 제공하고, 노조와 사용자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고, 기후 정책이 사회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빨리 평가하고 연구하자고 주장하며, 사회 보호 체계 개발과 지역 경제의 다양화 계획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의 필요성을 말한다. 이것은 노동자와 지역 사회가 갖는 취약성의 여러 측면들, 이를테면 일자리 영향에 관련된 불확실성, 일자리 상실의 위험성, 비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의 위험성, 광역 경제와 지역 경제의 황폐화 위험성을 다루는 정책 제안의 패키지다.

- 기후변화 대응은 혁신적 기술과 좀 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및 라이프스타일에 기반해,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고 높은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저탄소 사회를 건설하고, 동시에 괜찮은 노동과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업장의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UNFCCC 2011)
- 정의로운 전환은 ITUC 2차 총회에서 입장으로 채택되었으며, 국제 노동운동의 노력으로 칸쿤의 COP16 합의안에 포함됨
- 2017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정의로운 전환' 문구가 합의문 전문에 공식적으로 포함

○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과 쟁점
- 정의로운 전환 아이디어의 전용 또는 탈정치화의 위험성
- 정의로운 전환은 기성의 환경정책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라는 점
- 정부들과 국제 대부 기관들이 널리 활용하는 구조 조정이 '정의로운 전환'과 혼동돼서는 안 된다는 점.

"그런 대안적 모델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정당성에 여러 면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정의로운 전환'은 구조 조정을 옹호하는 이들이 허물어트린 접근법인 산업 계획(industrial planning)으로 복귀하는 것을 함축한다. 둘째, '정의로운 전환'은 역사적으로 사적 이해와 결탁해 일을 진행하는 정부의 영역으로 치부되던 산업 계획에 노동조합, 노동자, 지역 공동체가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이런 지역 공동체 안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적절하고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을 보장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조와 노동자들은 밀려난 노동자들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라고 주장할 것이다. 셋째, '정의로운 전환'은 사기업을 포함하는 시장 기반 해법이 지역과 산업의 재활성화에 유일한 해법이라는 관념에 도전한다."
-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은 중요한 두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정의로운 전환'의 조건들은 무엇인가? 둘째, '정의로운 전환'이 실현되는 경로에서 노동조합들이 경제적 조건과 정치적 조건들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가져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

○ 녹색일자리와 녹색경제의 성격
- 녹색경제를 요청하면서 환경 의제에 괜찮은 고용 의제를 논의의 지평에 올리는 효과
- 녹색일자리와 녹색 작업장 요구가 노조 활동에 갖는 유용성. 그린 밴(Green Ban)부터 그린칼라 일자리로의 발전
- 녹색성장인가 탈성장인가? 생태적 현대화론 및 녹색성장론의 한계. 녹색 자본주의 또는 자살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 현실의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인식. 경제성장에서 '경제보장'으로
- 노동조합운동의 '녹색화'에서 명실상부한 '녹색' 노동조합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을
- 장기적 시야와 당면의 산업 피해나 우려 사이의 간극
- 노동자 주도, 기후친화 산업정책과 계획의 가능성. 나아가서 기후변화 대응을 매개로 다른 생산과 조직 체계를 통한 탈자본주의 전략과 강령의 가능성

- 대안적 노조 접근(갱신된 신노조주의?)과 새로운 조직화/연대의 계기
- 녹색 일자리, 좋은 일자리, 정의로운 일자리의 관계

○ 산업과 부문 사이의 이해 차이와 전략
- 농업/식품/화학
- 건설: 에너지 효율화와 녹색건축, 재생에너지 일자리
- 자동차 등 제조업: 라르스 헨릭손이 환기하는 '루카스플랜'
- 철도 등 대중교통의 잠재력
- 광업과 에너지 생산업: 키스톤 XL을 둘러싼 대립. 화석에너지 광산과 핵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모색(캐나다, 미국, 호주 등)
- '극단 에너지'에 대한 노조 접근의 발전 (숀 스위니)
 . 에너지는 모든 노동조합의 관심사여야 한다
 . 방어할 수 없는 것을 더는 방어하지 말라
 . 일관성을 가져라
 . 조합원들에게 이야기하라
 . 적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동맹하라
 . 담대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라
 . 힘든 결정, 그러나 다른 선택은 없다

○ 한국의 상황과 쟁점
- 기후위기가 불러내는 정의로운 전환의 설득력, 그러나 답보하는 현실
- 최근의 국제적 사례들
 .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
 . 독일에서 석탄발전 퇴출과 고용 대안을 함께 풀고자 한 '탈석탄위원회'의 보고서
 . 미국 민주당 좌파에 의해 다시 주목받는 '녹색 뉴딜' 정책
 . 청소년/청년 기후 파업
- 기후변화 대응에 진지한 관심과 노력이 없었던 역대 정부
- 국제 기준 보다도 낙후한 노동 기본권을 확보하고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것이 우선인 노동조합운동의 현실
- 산업과 고용의 문제를 가지고 노동조합이 먼저 구상과 주장을 내놓기 어려움
- 조합원들의 당장의 이해와 먼 이슈를 이야기하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인기 없음
- 유명무실한 노사정 대화 기구
- 한국의 상황과 요구
 . 에너지 전환 정책 속에서 핵발전과 석탄발전 관련 업종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 제기
 .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은 노동력과 기술, 사이트의 매칭 문제 제기
 . 플랫폼 노동의 전면화와 내연기관의 종말 전망

○ 이론으로서의 정의로운 전환, 개념으로서의 ‘적록동맹’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방법은?
- 멸종하는 공룡이 아니라 살아남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기후변화 시대에 ‘적응’?
- 지속가능한 경제와 지역사회를 주도하며 스스로를 갱신하며 자본의 족쇄를 허무는 종(種)의 일원이 되기 위한 야심적 구상?
- 노동조합이 미래를 내다보는 산업 기획과 개입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기. 당장의 운동에 연대하며 배우기가 우선 필요

<참고>

최근 세계 노조운동의 청년 기후행동 지지 움직임 (TUED가 취합)

- 2019년 9월 "Global Climate Strike" 요청을 지지하는 전 세계 노조의 구체적인 발언과 행동. 배경에 대해서는 TUED Bulletin 88 및 후속 포스팅 참조.

○ 글로벌

ITUC. 셰런 버로우 사무총장은 2019년 시위를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며, “학생들은 지도자가 실패한 곳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대면하는 용기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의 용기는 우리의 지지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ITUC는 다가오는 9월 행사의 공식 “국제 파트너”로 선정.

국제 교원노조(EI). 3월에 진행 중인 학생 행동에 대한 강력한 지원 성명서를 발표. “Education International은 전 세계 학생들이 기후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보여준 에너지와 참여를 환영합니다. 그들의 결정과 헌신은 우리가 이 중요한 순간에 정확히 필요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너무 많은 정치인들에게 부족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원노조는 학생들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기후 탄력성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구조적 변화를 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후 변화는 소비자의 "좋은 행동"을 통해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후 정의의 첫 단계는 학생과 노동자 및 그 대표자들의 협조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입니다. 우리는 급진적 기후 행동과 정의로운 경제 전환에 대한 요구에 학생들을 지지합니다.”

국제공공서비스노조(PSI). 3월에 PSI는 시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발표.
“역사는 파업을 포함한 집단적 힘을 사용하여 보다 정당하고 안전한 경제 체제로 평화롭고 민주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968년에 많은 국가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학생들이 불의와 정치 체제의 행동에 대한 의지에 도전하기 위해 거리로 가라는 요청을 지지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다시 한번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인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있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대중 운동에 동참할 것임을 그들과 세계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후 행동을 위한 투쟁은 사람들을 이윤 앞에 두도록 만들기 위한 싸움입니다. 행성 B는 없으며 남은 시간도 없습니다.”
또한 이 성명서는 PSI 회원 조직들에게 다양한 행동을 취하도록 권장했다.
- 해당 지역의 파업을 조직하는 학생 운동가들과 함께 하십시오
- 파업을 지지하는 노조 또는 작업장 행동

- 젊은 노동자와 대화
- 노조/조합원들이 학생들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언론과 대화
- 소셜 미디어에 해시 태그 지정
- 기후 대중행동이 중요한 이유를 정치 지도자에게 설득

유럽공공서비스연합(EPSU)
3월에 EPSU는 지원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EPSU 그룹은 3월 15일 브뤼셀에서 “세계 행동의 날” 시위에 참여.
우리는 “기후를 위한 노동자”라는 슬로건 아래 큰 노조 블록과 함께 학교 및 대학생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다른 많은 행동들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졌으며 3월 12일 EPSU 집행위원회가 이를 지지했습니다. 집행위원회 직후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한 시장 기반 접근법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광범위한 동맹의 일원으로 모여서 에너지 시스템의 공공 및 지역 사회 소유 형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 호주

호주서비스연합(ASU)
7월말 호주서비스연합의 전국 집행위원회는 9월 기후 학교파업에 대한 지지 성명 발표.

호주 교원노조 빅토리아 지부
2019년 8월 1일, AEU 빅토리아 지부는 기후 파업 요청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으며, 회원들에게 9월 20일에 작업장 행동을 조직하고, 참가를 위해 일터를 터나고 하위 지부가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파업에 연대를 보이도록 격려했다.

국립고등교육연합 (NTEU) 및 전국학생연합(NUS)
호주의 NTEU와 NUS는 호주 전역에서 계획된 8월 9일 학생 파업을 지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 “NTEU 회원들은 학생들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연방정부는 기후변화를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다는 여전히 불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채굴과 에너지 수요가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호주 해운노조 (MUA) 시드니 지부
7월 초, MUA 시드니 지부는 학생 기후파업에 대한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전국 기구가 “노동자들이 다음 국제 파업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9월 20일에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파업 준비”를 촉구했다. 이 성명서는 화석연료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가 공적 투자, 공적 소유, 분명한 일자리 보장과 훈련 및 직접적인 전환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해로운 재생가능에너지 자산에 대한 공적 투자 요구도 분명히 했다.
“우리는 공적 소유 하에서 해상 풍력산업을 신속하게 확장하기 위해 모든 수준의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캠페인 확장에 MUA 조합원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동조합 자원 및 조력에 대한 추가적 약속을 요구한다”

지역사회 및 공공부문 노조(CPSU) - 기상청
지난 8월, 기후 과학자, 일기예보관, 연구원, 엔지니어 등을 대표하는 기상청의 CPSU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들은 “화석연료 산업 및 그 지역 사회의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작업과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며 연대를 표현하면서 “경제의 탈탄소화와 함께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일자리 보장”을 요구했다. 또한 이 동의안은 토착 원주민과의 연대를 재확인했다.

빅토리아 노조평의회(Victorian Trades Hall)
8월 9일 호주 빅토리아 주 노동조합의 최고 기구인 빅토리아 노조평의회는 만장일치로 9월 20일 전 세계 기후행동을 승인했으며, 조합원들이 “가능한 한” 참여하도록 결의했다. 평의회는 9월 20일 기후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조와 조합원을 조직하는 것을 돕고 연계를 구축하기 위해 9월 초 모든 노조 회의 소집을 지지했다.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교사 연맹 (BCTF)
BCTF는 학생 파업에 연대하여 9월 23일에 “기후정의를 위한 집회와 현장수업(Rally & Teach-in for Climate Justice)”을 실시할 것이다. 이 날은 ‘전문역량 개발의 날(professional development day)’로 유급이지만 수업이 없는 날이어서 노조는 모든 교사가 전문역량 개발의 일환으로 집회에 참석하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BCTF Local 61의 행동위원회 위원장 Tara Ehrcke에 따르면, 노조는 학생 및 학부모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기후행동 계획을 준비하도록 로비를 벌였다(6월 말 실시)을 준비했습니다. Ehrcke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 한 최초의 학운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도에 따라 나나이모와 밴쿠버를 포함하여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다른 여러 학운위가 올 가을 유사한 움직임을 고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토론토와 요크 지역 노동자평의회
캐나다 최대의 노동자평의회로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약 20만 명을 대표하는 TYRLC는 2019년 8월 1일 개최된 총회에서 다가오는 전 세계적 기후운동과 관련하여 행동을 촉구했다.
- 모든 가맹 조직이 기후정의 투쟁에서 노동자의 역할로 참여하도록 조직할 것. 기후에 관한 협약 쟁취, 공동 작업장 환경위원회 설치, 사용자에게 기후를 보호하는 작업을 요구할 것 등.

- 모든 가맹 조직이 보수당 연방정부를 패퇴시키도록 동원하고 보수당 지방정부들의 파괴적 기후정책에 반대하도록 촉구할 것
- 활동가 네트워크가 앞으로 2년간 모든 노조 회합에서 기후정의를 이슈로 삼도록 조직할 것
- 전국의 노동자평의회들이 9월 27일 행동을 포함하여 지방과 적국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것
- 급진적 기후운동 조직가들과 연대하여 기후행동의 토론과 더불어 공평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분석을 심화하도록 도울 것
- “나중에는 더 많이 지불하게 될 거야(We’ll pay much more later)”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것
-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생과 청년의 활동을 지원할 것

○ 프랑스

노동총연맹(CGT)
7월말 프랑스 CGT의 사무총장 필립 마르티네즈는 9월 기후 행동을 지지할 것이라고 발표.
“우리는 기후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9월 20일과 27일, 매우 중요한 이틀 중 하루의 행동의 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회 비상사태와 기후 비상사태가 불가피합니다. CGT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몇 가지 기획을 갖고 있는 청년 단체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 독일

Verdi (공공부문연합노조, United Services Trade Union)
프랑크 브스리스케 사무총장은 (독일 또는) 베르디 회원 노조 조합원들이 9월 20일 기후 파업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파업 지원을 위한 휴무를 집단적으로 요구하거나 점심 휴무를 조직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베르디의 트위터 계정에서 브스리스케는 “누구든 일을 접고 거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확실히 그렇게 할 것이구요”라고 썼다.

IG Bau (건설 및 부동산 서비스 연합)
IG Bau는 건설 현장의 조합원들이 기후 파업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노조는 사용자들에게 직원들에게 금요일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독일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40%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GEW (교육 및 과학 노동조합)

GEW는 “Fridays for Future” 시위를 지지해 왔다. 호프만은 많은 GEW 조합원들이 법적으로 파업할 권리가 없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조는 조합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목표는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노조 집행위원인 그녀는 기후 보호를 “더 큰 맥락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미디어의 잘못된 보도가 사회적 생태학적으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다.

EVG (철도 및 운송 노동조합)
EVG는 이 운동의 목표를 지지하며, “Fridays for Future” 주최자와 긴밀한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회원 조직들은 이미 금요일 시위에 참여해왔으며, 노조는 9월 20일 시위에도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기후 보호는 보다 강력한 철도 네트워크와 보다 큰 철도 인프라 투자를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IG 메탈
지난 6월, 독일 최대노조 IG Metall은 공정하고 생태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10편이 넘는 열차와 800대의 버스가 전세로 투입되어 수도 베를린의 거리를 수만 명의 금속 노동자로 채웠다. 현재 IG Metall은 9월 기후 파업을 지지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 이탈리아

CGIL (이탈리아노동총연맹)
2019년 7월, Maurizio Landini 사무총장이 이끄는 CGIL 대표단은 #FridaysForFuture 운동 대표들을 만나 기후정의 투쟁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확인했다. 최근에 CGIL은 지구 기후파업 지원을 선언했고, 레체(Lecce)시에서 열릴 2019년 노동절의 일환으로 9월 21일에 열리는 행사를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9월 27일에는 기후 비상사태와 기후정의 투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작업장 회의가 소집된다. 노조는 이것이 기후변화 문제, 인권, 사회 정의 및 완전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고 근본적으로 행동할 필요성에 대해 노동자들 사이에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 뉴질랜드
(참고: 뉴질랜드에서는 9월 27일에 “총파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뉴질랜드를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를 위한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촉구한다!”)

뉴질랜드노동조합협의회 (NZCTU)
2019년 3월, NZCTU는 학생 주도의 기후 파업에 대한 지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후 7월, 협의회는 계획된 9월 행동에 대한 새로운 지원 성명서를 발표하여 조합원

들이 “작은 간단한 행동부터 작업장 회의 조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노조는 9월 27일에 노동조합 내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보여주고 지지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뉴질랜드공공서비스노조(NZPSA)
뉴질랜드 최대 노동조합인 NZPSA는 적어도 3월 15일 "School Strike 4 Climate" 이후로 지속적으로 청소년 기후 파업을 지지해왔다. 노조는 기후변화에 대한 빠른 행동을 취하는 데에 있어 노조로서의 역할을 인식한다. 기후변화는 조합원의 업무와 직장에 영향을 미치며, 노동 관행도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노조는 Aotearoa NZ(마오리어로 뉴질랜드)의 여러 노조 중 하나로서 저탄소 배출 경제로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NZPSA는 이전부터 “공적 소유권의 중요성과 필수 서비스의 통제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FIRST Union
2019년 3월, 뉴질랜드의 FIRST Union은 청소년 주도 시위를 지원하고 나섰다. 노조의 “정의로운 전환” 대변인 저스틴 월리스에 따르면, 젊은이들은 정의로운 전환의 새로운 시대에 일자리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한 미래의 노동자들이며, 따라서 한 방 얻어맞은 어른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지원해야 한다.

Unite Union

Unite는 9월 27일 파업에 때맞추어 전국의 조합원들이 “작업 중지” 회의를 조직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노조연합(SAFTU)
SAFTU의 사무총장은 연합의 전국 집행위원회에서, 회원 조합 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와 전 세계 모든 노동조합이 “지구 기후파업을 지원하고 정부와 기업 부문의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 행진과 시위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 영국

제빵 식품 및 연합노조 (BFAWU)
2019년 초, BFAWU는 학생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히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
BFAWU는 회원들이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녀와 후손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원한다면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 지난 몇 달과 몇 주의 놀라운 학교 기후파업과 멸종저항의 고

무적인 행동으로 기후변화 논쟁은 새로운 절박성으로 다가왔다. 이 운동의 첫 성공은 영국 의회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말과 일치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툰베리와 청년들의 행동은 노동조합운동의 활동가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다. 이제 조합원으로서 연대하고 기후 행동의 요구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하자. 노조운동 전체가 나서서 백만 개의 기후 일자리와 국가 기후서비스를 도입하여 기후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긴급 행동의 핵심으로 그린뉴딜을 실현해야 한다.

UNISON

약 14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영국 최대 노동조합인 UNISON 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청년 기후파업을 지원하는 행동 주간(Green UNISON Week)을 조직하고 있다. 이는 UNISON 회원들에게 9월 20일 학교 기후파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반노조법은 UNISON 지부들이 파업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지만, 학교 운동가들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 UNISON 지부에 환경 담당자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지부와 관심있는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녹색 담당자가 되도록 격려하십시오!
-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사용주가 하고 있는 일을 알아보십시오. 사용자에게 이 정보를 UNISON과 공유하도록 요청하십시오.
- UNISON 그린 이벤트를 개최하십시오. 구내식당, 영화 쇼 또는 대화에서 점심시간 모임을 운영할 수도 있고, 학생 기후 파업가나 인근 환경캠페인 단체를 연사를 초대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 녹색 설문 조사를 실행하십시오. 직장을 '녹색화'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친구와 동료에게 문의하고,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경품 추첨을 제공하십시오.
- 녹색 작업장 훈련 활동을 운영하십시오. UNISON 학습 담당자와 상담하고 점심 시간 활동 세션을 운영하십시오.

UNISON 스코틀랜드

Dave Prentis 사무총장은 학생이 주도하는 기후행동에 대한 UNISON Scotland의 지원을 확인 하면서 기후 위기를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단일한 위협”으로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수요에 따라 에너지 공급 업체 국유화 요구를 강조했다. 급진적 기후 행동, 그리고 멸종 저항과 학생 기후 파업 등의 최근 시위가 강조되었습니다.

대학노조 (UCU)

UCU는 2019년 9월 8~11일 브라이튼에서 열리는 영국 노동총연맹(TUC) 회의에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문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학생들의 엄청난 영향을 언급하며, 9월 20일 세계 학생파업과 때맞추어 30분의 작업중지 연대 파업을 요구했다.

영국 작가길드 (WGGB)
6월 연례총회에서 WGGB는 9월 20일 청년 기후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 미국

앨러미다 노동자평의회 (ALC) – 캘리포니아
2019년 8월 5일, ALC는 만장일치로 9월 20일 청년 기후 행동을 지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콘트라 코스타 노동자평의회 (CCLC) – 캘리포니아
8월 21일 회의에서 CCLC는 AFSCME Local 3299, UAW Local 2865 및 UAW Local 5810이 공동으로 주최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2주 전에 ALC의 결의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다.

한국 정의로운 전환의 쟁점: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구준모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

1. 석탄화력 발전소는 폐쇄 중,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업무명령 3호로 석탄화력 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를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직후 한국발전산업노조(이하 발전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실행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알기에, 수명이 다한 노후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애틋하게 환영한다."

이 성명서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잠재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환경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동의하고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주목 받았다. 또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문제에 대한 대안과 전력 산업의 구조 개편까지 언급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3월에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올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사업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2019년 말 발표 예정인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및 LNG 연료 전환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표] 폐쇄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구분	용량	폐쇄 시기	회사
서천 1호기	200MW	2017	중부발전
서천 2호기	200MW	2017	
영동 1호기	125MW	2017	남동발전
영동 2호기	200MW	2019.1	
삼천포 1호기	560MW	2019.12	남동발전
삼천포 2호기	560MW	2019.12	
호남 1호기	250MW	2021.1	동서발전
호남 2호기	250MW	2021.1	
보령 1호기	500MW	2022.5	중부발전
보령 2호기	500MW	2022.5	
용량 합계	**3,345MW**		

그러나, 고용은?

2017년 5월 미세먼지 대책 발표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대체발전 등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의 고용이 더 어렵게 되는 일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하나둘씩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고용 전환 수단으로 무엇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청취하지도 않고 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은 자체 인력 전환, 퇴직으로 인한 감소분 등을 통해서 고용 충격을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발전소 근무 인력 중 상당수가 외주화된 상황이고, 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로 인한 고용 전환 문제는 임시방편으로는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

[표] 보령 1,2호기 근무 인력

구분	발전부문 직접근무 인력	간접 지원 인력		계
		업무지원 인력	기타 인력 (경비, 청소 등)	
중부발전	142명	50명	38명	230명
협력기업	209명	-	-	209명
합 계	**351명**	**50명**	**38명**	**439명**

* 업무지원 인력 및 기타 인력: 보령본부 전체 지원인력 중 보령 1,2호기 해당 비율 적용
* 협력기업 근무 인력 내역
  - 경상 정비: 140명(보일러&터빈설비 88명, 석탄설비 22명, 탈황설비 18명, 제어설비 12명)
  - 연료환경설비 위탁운전: 69명

그러나, 신규 민자 발전은?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건설 중이던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해서 건설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LNG로 연료전환하는 것 외에 나머지 8기는 환경 기준만 일부 상향한 채 그대로 건설 중이다. 이들 대다수는 민자발전이거나 민자와 발전공기업의 합작 사업인데, 행정 절차 이후에 사업을 중단시켰을 경우에 발생할 법적 소송 등의 문제를 들어 그대로 허용한 것이다.

2022년까지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발전공기업 소속이고 그 용량은 3,345MW이다. 반면 2022년까지 준공되어 신규 가동될 석탄화력발전소는 민자발전소이고 용량이 7,260MW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것보다 두 배 이상이다. 만약 2020년대 이후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가속화되고 재생에너지 신규 사업자들이 속속 진입하면, 발전 부문에 민간 대기업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기업이 퇴조하고 민간 기업, 특히 대자본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한 것일까? 또한 바람직한 것일까?

[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황

구분	용량	가동 시기	회사	지분
신서천 1호기	1000MW	2020.3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고성하이파워 1	1040MW	2021.4	고성그린파워	SK가스, SK건설, 남동발전, KDB인프라
고성하이파워 2	1040MW	2021.10		
삼척포스파워 1	1050MW	2021.12	포스파워	포스코에너지
삼척포스파워 2	1050MW	2022.6		
강릉안인화력 1	1040MW	2022.6	강릉에코파워	삼성물산, 남동발전, KB국민은행
강릉안인화력 2	1040MW	2022.6		
용량 합계	**7,260MW**			
당진에코파워1,2 (LNG전환)	2040MW (970*2)	2024	SK가스	SK가스, 동서발전, 산업은행

2. 정의로운 전환: 어떤 접근법을 선택할 것인가

정의로운 전환은 아직 한국에서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담론과 정책에서 상투적인 용어가 되고 있다. 2015년의 파리협정에도 “국가별로 정의된 발전의 우선순위에 따라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과 괜찮은 노동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긴요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의로운 전환을 반영하였다.[1] 하지만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 내용과 그것이 지향하는 궁극적 방향에는 대해서는 여러 차이가 존재한다.

협의와 광의의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전환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에게 전환의 비용이 부당하게 부과되지 않아야 하고, 이들이 전환에 관한 의사 결정과 전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노동조합의 측면에서 보자면,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위협 받는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노동환경이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되고, 불가피할 경우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경제나 산업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따라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에 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1980년대부터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의 노동조합 운동에서 그 개념이 제기되고 발전했다. 일반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은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를 노동에 초점을 맞춘 좁은 의미의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ITUC(국제노총)이 총회에서 채택한 정의로운 전환 개념도 노동조합에 초점을 맞추면서 ‘통합적 접근’을 중시한다.

1)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english_paris_agreement.pdf

“총회는 사회 진보, 환경 보호, 경제적 필요가 민주적 거버넌스의 틀로 함께 수용되고, 여기서 노동자의 권리와 다른 인간의 권리가 존중되며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통합적 접근을 고취하도록 노력한다.”(ITUC 2010, 1: 번역서 53)

정의로운 전환을 보다 넓은 사회적 변화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용법도 있다. 환경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사회정책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사회의 불의도 함께 해소될 때만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생태적 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북미에서는 환경정의운동의 맥락에서 지역 공동체, 유색인종 공동체, 빈곤층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환이라는 의미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널리 사용된다.[2]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은 사회 전체의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주요한 항목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것이다.

옅은 전환이 아닌 짙은 전환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보다 급진적인 인식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기후가 아니라, 체제를 변화시키자”(System Change Not Climate Change)는 기후정의운동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까지 변화시켜야지, 에너지 전환과 생태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신자유주의 사회의 금융 및 기업 권력, 소수 엘리트들의 부와 권력에 대한 독점, 성·인종 등에 따른 차별과 멸시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 에너지 전환 과정과 동반되는 것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보자는 주장이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환 정책 방법론에 있어서도 시장 메커니즘이나 금융 투기를 활용하는 방식, 북반구와 남반구의 차별을 활용하고 강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이고 국제주의적인 접근을 옹호한다.

사회적 대화인가, 사회적 권력인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인 노동운동 네트워크인 에너지민주주의를위한노동조합(TUED)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노동조합의 접근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3]

하나는 사회적 대화 접근법이다. 사회적 대화 접근법을 채택한 담론들은 오늘날 정의로운 전환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본다. 에너지 전환 역시 보다 과감할 필요가 있지만 잘 진행 중이라고 파악한다. 이들은 사용자, 정부, 노동자들 간의 협력이 국제적, 국가적, 지

2) https://mronline.org/2019/06/22/ecosocialism-and-a-just-transition/#_ednref9
3) http://unionsforenergydemocracy.org/resources/tued-publications/tued-working-paper-11-trade-unions-and-just-transition/

역적 수준에서 추진되었고 노동자들을 위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국제노총(ITUC),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이러한 담론과 접근법의 주요한 국제적 행위자들이다.

그러나 각국의 사례들을 검토해보면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에 관한 모범적인 정의로운 전환의 사례는 매우 드물다. 반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이 주요 국제기구에 채택되고 활용됨에 따라, 그 핵심 내용들이 훼손되고 있다. 주류의 친성장 담론을 보완하는 하위 항목에 정의로운 전환이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2000년대에 '괜찮은 노동'(Decent Work)이 ILO의 주요 정책 목표로 채택되고 국제노총 등의 캠페인으로 자리잡고 G8 등의 국제회의에서도 다루어졌던 것과 비교할 수 있다. 괜찮은 노동에 대한 고상한 말과 다양한 정책 목표, 수단이 동원되었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에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노동조합의 조직력 확대, 기업 및 자본가 권력과의 대결, 정부 정책의 탈신자유의화 및 관료의 민주화, 좌파 정치세력의 성장이라는 기본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서 실질적인 전환을 이끌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대안적 접근은 사회적 권력 접근법이다. 물론 사회적 권력 접근법이 반드시 전투적인 쟁의 행위와 투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대화/협상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운동의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권력 접근법은 복합적인 사회 권력 구조의 변화 없이 이루어지는 손쉬운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조합 스스로가 협소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틀을 벗어나, 노동자 전체를 위한 조직화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노동조합이 경제, 환경, 불평등, 성, 인종 등의 장벽을 넘어서 사회운동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접근은 생태 사회주의나 대안적 정치경제학에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다. TUED는 이런 접근이 노동조합 운동 내에서 아직 지배적이지는 않지만 속속 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보며, 스스로를 이를 위한 견인차가 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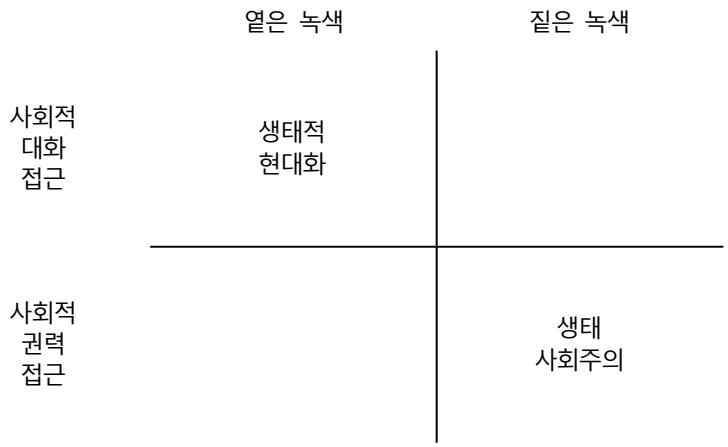
사회권력 접근법은 특히 독일의 재공영화(재지자체화) 운동, 영국 노동당의 에너지 국유화 계획과 노동조합의 혁신, 미국의 그린 뉴딜 논쟁 등에 주목하면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공 부문과 공적 소유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이런 운동과 사회 정책의 현실화 과정을 통해서 신자유주의의 기업·금융 권력을 약화시키고 대안적인 사회 권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TUED는 이를 에너지 민주주의와 같은 것이라고 파악한다.

정의로운 전환의 이념형: 생태적 현대화와 생태 사회주의

지금까지 검토한 상이한 정의로운 전환의 담론과 접근법을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 식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전환하고자 하는 대안 사회의 성격을 옅은 녹색과 짙은 녹색으로 구분하고, 전환을 위한 접근법이자 방법론을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권력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옅은 녹색 사회로의 전환 모델을 생

태적 현대화로 파악할 수 있다(2사분면). 반면 사회적 권력을 통한 짙은 녹색 사회로의 전환 모델은 생태 사회주의로 간주할 수 있다(3사분면).

[그림] 정의로운 전환의 이념형



오늘날 국가와 국제기구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포함하는 경우에도 하위 파트너로 동원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고려하더라도, 고도의 코포라티즘 체제를 구축한 북유럽마저도 노사정 합의 모델이 형해화되어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권한은 약화되고 있다.[4] 따라서 낡은 방식의 사회적 대화에 의존한 채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한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는 없어 보인다. 또한 오늘날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위기가 말해주는 바는 이윤과 성장에 목을 매는 자본주의를 표면적으로만 가다듬는 옅은 전환으로 문제의 해결이 요원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오늘날 자본주의 심층의 권력 구조까지 변화시키는 짙은 녹색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이념형적 구분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생태적 현대화와 생태 사회주의 각각은 물론이고 그 사이에 다양한 변이들과 혼합 모델들이 존재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현실에서 생태적 현대화조차도 매우 이상적인 대안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정의로운 전환이 지향하는 바와 그 방법론, 주체론에 관한 다양한 담론과 운동의 전술을 검토하고 토론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다.

3. 공적인 에너지 전환의 사례들

노동조합 운동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사회적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면서 기후위기의 긴급성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형 정의로운 전환을 '공적이고 민주적인 전환'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최근에 부상하는 외국의 사례들을 간략히 살펴보자.

4)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journal&category1=91&nid=4938

첫째, 유럽에서는 지난 30년간 진행된 민영화가 실패로 귀결되면서 (재)공영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에너지 재공영화는 영국, 미국 등지에서도 진행 중이지만 독일에서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초국적연구소(TNI)에 따르면 2016년까지 독일에서 284개의 에너지 사업이 재공영화되었다. 175개가 민영화되었다가 재공영화되었고, 109개가 공영기관으로 신설되었다. 대부분은 지자체가 전력 및 가스망을 공영화한 것이다.[5)]

독일 재공영화는 에너지 산업 구조가 한국과 상이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시장 및 산업이 이미 민영화되어 자유화, 지역화가 전제된 상황에서 모색된 대안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공영화가 성공적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독일 에너지 산업의 절반은 4대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전력산업의 자유화를 여전히 옹호하고 있다. 즉 대기업과 시장 자유화가 지배하는 에너지 시스템과 재공영화, 에너지 시민권, 공동체 에너지 등의 대안 모색이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상태이다.

둘째, 영국에서는 제레미 코빈이 이끄는 노동당이 에너지 산업의 국유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노동당은 송전망과 원자력발전은 국유화하고, 배전망과 재생에너지 발전회사들은 지역 공기업으로 재편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 소유로의 전환이 가져올 장점을 다섯 가지로 꼽고 있다. 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보조금에 의존한 민간 재생에너지 투자의 한계 극복) ②보편적인 에너지 공급(현재 요금 미납 등으로 인한 공급 중단 빈번 개선) ③비용 절감과 운영 개선(높은 에너지 가격, 복잡한 요금제와 계약 체계, 높은 자금조달 비용 개선) ④에너지 시스템의 민주화 ⑤지역 경제의 강화 [6)]

코빈의 에너지 국유화 계획은 매우 야심찬 것이다. 다른 유럽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미 민영화되고 분절화된 에너지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발전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국유화해서 투명한 공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특징적이다.

셋째, 미국의 그린 뉴딜 논쟁을 참고할 수 있다. 2019년 2월 미국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이 주도하여 제출한 그린 뉴딜 결의안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 진보진영 내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정책으로 계승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2019년 8월 말에 그린 뉴딜 정책의 초안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7)]

1)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전력생산, 2050년까지 완전한 탈탄소화
2) 2000만 개의 양질의 노조있는 일자리 창출로 실업을 없애기
3) 16조 3천억 달러(약 1경 9800조 원)의 공적인 직접 투자
4)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5) 기후변화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

5) https://www.tni.org/files/publication-downloads/reclaiming_public_services.pdf
6) Hall, D. 2016. Public ownership of the UK energy system – benefits, costs and processes
7) https://berniesanders.com/issues/the-green-new-deal/

6) 주거환경 개선, 에너지 비용 감축, 대중교통의 현대화, 공공서비스의 개선 등을 통한 미국 가계의 비용을 절감

7)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소규모 농가를 지원

8) 아메리카 원주민, 유색인 공동체 등 취약한 공동체에 대한 정의로운 지원

9) 파리협정 재가입, 녹색기후기금에 2000억 달러 지원 등을 통해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

10) 전 세계 배출량 중에 미국의 감축몫을 초과 달성하기

11) 에너지 소비 감축, 전기차 등 친환경 연구 개발에 대규모 투자

12) 기후정의 운동을 확대하기

13) 토양, 숲, 대초원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투자

14) 이러한 계획을 위해서 15년 이상 막대한 투자가 필요함

- 화석연료 산업이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불
- 지역 전력 마케팅국(Power Marketing Authorities)에 의한 도매 에너지 생산 수익(?)
- 세계의 석유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되는 군비 축소
- 2천만 개의 새 일자리 창출로 발생되는 새로운 소득세
- 부유층과 대기업에게 정당한 몫 걷기

4. 한국 에너지 산업 구조 및 전환 정치의 특징

그렇다면 이렇게 파악된 정의로운 전환과 공유화를 중심에 둔 전환 계획들은 한국 에너지 산업, 특히 전력 부문의 전환에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을까? 이를 탐구하기 전에 우선 한국 에너지 산업과 노동시장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외국의 참고 사례들은 대부분 한국의 에너지 산업 구조 및 노동시장의 특징과는 상이한 것들이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전환의 사례로 한국에 가장 많이 소개되는 독일은 900여 개의 소규모 배전 및 전력 판매 회사들이 존재한다. 한국의 전력 산업 구조를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독일은 노동시장도 노사정 간의 산별교섭이나 지역별교섭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통제된다. 역시 한국과는 전혀 다르다.

한편 캐나다나 호주의 경우에 자유주의적인 노동시장이지만, 노동조합에 친화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경우에 노동조합을 포함시키거나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상한 경우가 있다. 최근 캐나다 정부가 구성한 정의로운 전환 태스크포스는 캐나다노총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노동조합 대표 및 노동조합측 전문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8] 역시 한국의 사정과는 매우 다르다.

---

8)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services/climate-change/task-force-just-transition.html

첫째, 한국의 에너지 산업, 특히 전력 산업은 대부분 정부 산하 공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송전-배전-판매는 한전에 의해서 전국적 범위로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발전 부문은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중단된 후에, 한전의 자회사로 화력발전 5개사와 원자력발전 1개사로 존재한다. 하지만 왜 화력발전사들이 아무런 기준 없이 5개로 쪼개져서 경쟁해야 하는지, 원자력발전은 독립되어 전문 기업으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타당성을 제대로 토론한 바도 없다. 오직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했던 분할 매각을 위한 인위적인 분사였고, 그 후에는 신자유주의적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쟁과 비교, 통치의 대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이었다.

둘째,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 주도성이 매우 강력하다. 김대중 정권의 분할 매각식 민영화 계획,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 간 경쟁 강화와 발전 및 천연가스 도입 개방식의 자유화 조치가 일부 이루어졌고 이 모두는 정부와 기재부 및 산업부 관료들이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한편 최근에는 '탈핵'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중심의 과잉 정치화(정쟁화)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정책 결정 및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되지 않고 배제되고 있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에 대한 파괴가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되었고 지금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 않다. 또한 현 정부가 노동조합, 특히 민주노조들을 포용하고 있지도 않다.

셋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 부문, 특히 발전 부문에서 민간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정부들에서 민간 대기업의 복합화력(LNG) 발전소가 대거 확대되었고, 향후 5년간 민간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준공될 예정이다. 최근 발전량 기준으로 20~25% 수준인 민자 발전의 비중은 5년 뒤에는 30%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고, 공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가속화될 경우에 그 비중은 더 커질 것이다. 또한 민간 대자본과 중소 재생에너지업자들에 의한 전력 판매시장 개방 요구가 존재한다. 에너지 전환과 신기술 도입,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와 자유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한국의 기업별 노동시장 구조는 일반적인 산업 정책을 통한 이직과 재취업의 가능성을 크게 제약한다.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최근의 조선 중공업 부문까지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이슈가 될 때 반복해서 "국유화"가 제기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고용 축소가 예상되는 기업 매각/인수를 제외한다면 국유화 외에 다른 대안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구호가 현실성을 가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고용 전환을 검토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시민권 부재, 기업별 노동시장, 해고 후에 부정적인 재취업 전망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단편적인 고용전환기금이나 퇴직기금 같은 방식의 접근은 명예퇴직 유도 정책과 별 차별성이 없을 수 있다.

5. 한국형 정의로운 전환의 모색

그렇다면 에너지 부문에서 한국형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모색해야 할까.[9] 먼저 공적이고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이 단순히 석탄과 석유 같은 에너지원을 바꾸자는 것을 넘어서 그 과정에서 사회적 불의를 철폐하자는 것이라면, 정의로운 전환의 포부는 훨씬 커져야 한다. 정부에게 노동자를 고려하는 산업정책을 요구하거나, 고용전환기금을 확보하는 정도에 멈춘다면 피해자 구제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다. 보다 야심찬 전환의 방향과 방법론이 필요하다. 필자는 그것을 공적이고 민주적인 전환으로 부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 속력, 주체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본다.

한국형 재공영화: 발전공기업의 재편과 시장형 공기업 해지

지금과 같은 화력발전 5개사+원자력 1개사 구조가 경제적으로 효과적이지 않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도 부적절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2019년 8월 말에 발표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는 발전사의 과열경쟁과 외주화가 비효율의 원인이고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발전사들의 통합과 외주화된 업무의 재통합과 공영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발전5사로의 분할정책이 불필요한 과열경쟁과 비효율을 가져 오는 주범이고, 연료설비운전과 경상정비의 민간개방(외주화) 정책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와 민간개방이라는 정책의 이름으로 발전소의 영리화와 외주화를 강행하여 민간업체의 돈벌이를 보장 해줌과 동시에 협력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의 문제를 초래했다. 연속 적인 일관공정 상에 있는 업무임에도 무리한 분할과 외주화로 소통의 단절과 책임의 공백 상태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한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여 협력사 노동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악화시켜온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 전반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재검토가 요구된다. 발전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미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ⅰ) 발전분야의 수직적 내지 수평적 통합을 고려하고 ⅱ) 흐름공정의 특성상 분리해서는 안 되는 연료환경설비 운전을 발전회사로 재통합하고 ⅲ) 경상정비 업무를 통합 공영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공기업 내부에 발전원 전환을 통한 고용 전환의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6개 발전공기업들은 연료원을 고르게 분배하고 지역화하는 방식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뒷장 그림 참고) 이를 통해 공기업 내부적으로 전환의 여력이 확보되고,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발전공사로 변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시장형 공기업 체제에서 벗어나 에너지 전

9) 2017년에 발표한 보다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의 석탄화력 정책 분석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 보고서의 6장을 참조. http://www.ppip.or.kr/board_MRhQ99/388

환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사회적'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한국형 재공영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형 국유화: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중단과 매입 후 폐지 또는 연료 전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탄소 잠김(또는 탄소 자물쇠 carbon lock-in) 효과를 만든다.[10] 새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준공 후에 3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가동된다.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과 가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2017년 논란 당시 건설 중이던 9개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된 비용은 민간 기업들의 주장으로 약 2조 8천억 원이었다. 2년 이상 지난만큼 그 비용이 상당히 증가했으리라고 예상되지만 기후위기 및 미세먼지 대응의 긴급성으로 보았을 때 현재 필요한 수 조 원의 예산은 더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최선의 투자이다. 이를 발전공기업이 인수하여 연료전환할 경우에 매입 비용은 자산으로 전환되고 운용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직접 투여되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에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매입하여 패지하거나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국유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형 그린 뉴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노동조합을 통한 전환 전략

그린 뉴딜이 주목을 받는 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투자와 전환 계획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시장과 기업에 맡겨둔 에너지 전환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이 놓여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8년의 재생에너지 용량 증대가 예상치 못한 정체"에 직면했고 이는 "기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양의 60%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1] 기후변화나 에너지 전환에 대해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소개되는 독일에서조차 시장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2007년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줄이는 <2020 기후변화 행동 프로그램>을 발족했다. 이는 대부분 시장 기반의 정책을 사용하는 포괄적인 국가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7년 독일의 온실가스 감축은 30%를 밑돌았고, 결국 독일 정부는 감축 목표를 낮추었다.[12]

유럽에서 최근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 투자가 줄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태양광 과 풍력의 단가가 낮아지고 있지만, 민간 자본의 입장에서 이것은 투자 수익률의 하락을 의미한다. FIT 제도가 축소되자 특히 태양광 붐도 사라졌다. 자유 전력 거래 시장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13] 특히 FIT를 통한 태양광 투

10) http://climateaction.re.kr/index.php?document_srl=175132&mid=news01
11) https://www.iea.org/newsroom/news/2019/may/renewable-capacity-growth-worldwide-stalled-in-2018-after-two-decades-of-strong-e.html?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_axiosgenerate&stream=top
12) https://www.bloomberg.com/graphics/2018-germany-emissions/
13) http://unionsforenergydemocracy.org/tued-bulletin-85/

자 붐은 여러 나라에서 5년 정도 지속되다가 과도한 비용 발생 문제로 FIT가 축소되면 급격히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계획하고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형 그린 뉴딜을 구상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일자리와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이다. 녹색 일자리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이 많이 제출되었지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신규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보다 임금, 노동조건 등 고용의 질 면에서 나쁜 경우가 많다. 또한 노동조합이 없는 일자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버니 샌더스가 2000만 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일자리를 강조한 것은 노동조합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의 혁신과 발전

한국형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은 조직된 노동과 사회운동의 힘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운동의 혁신과 도약이 필수적이다.

아쉽게도 에너지 부문의 노동운동은 보수정권이 주도한 노동조합 파괴의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작업장과 자기 이익에만 갇히는 현장주의와 실리주의 경향도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노조들이 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인정받고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역시 매우 중요하다. 둘을 떨어뜨려 생각할 필요가 없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산업의 변화와 노동 환경의 변화도 현실화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회 변화의 흐름을 꿰뚫고 그에 사후적·보수적이 아니라 선제적·진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선은 노동운동이 기후위기의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과 흐름을 이해하고, 그 길에 동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 글에서 검토한 에너지 부문을 넘어서 금속, 화학, 건설, 운수, 보건의료 등 다방면에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에너지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 즉 공적이고 민주적인 전환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산업구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검토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찾는 과정으로 현장 교육, 에너지 부문 노동운동의 혁신 및 발전과 함께 진행될 것이다.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한국 노동운동의 대응은 한 발 늦었다. 하지만 한국사회 전반의 기후위기 대응 속도에 비추어보자면 많이 늦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의로운 전환의 좌표를 설정하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즉시 착수하자. 동시에 보다 담대한 비전을 가져보자.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실행을 환영한다

취임 엿새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6월 한 달간 일시 가동 중단(셧 다운)'을 지시했다. 이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을 정례화하고, 임기 내 10기의 노후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의 정권이 여론 무마용으로 미래의 계획만을 대책이랍시고 발표하고서도 매번 실행을 지연시켜 변죽만을 울린 데 반해,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을 이행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했다. 또한 노후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문제와 관련하여 "대체 발전 등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의 고용이 더 어렵게 되는 일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언급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얼마나 깊고 폭넓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대신에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비싼 LNG발전소를 가동함으로써 약 6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추가 비용으로 인해 전기 요금 인상이나 한전의 손실을 우려하는 일부 언론의 우려는 기우다. 국제적인 저유가/저석탄가로 한전과 6개 발전 공기업은 수년째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고, 작년 당기순이익을 합치면 11조 8,000억 원에 이르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가동 중단에 이어 신규 원전 취소,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백지화가 이행되면 전기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전력 산업 또는 발전 공기업 통합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 인력 및 경쟁 비용을 줄이고, 연료 및 자재를 일괄구매/관리한다면 수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발전 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 민간발전에 대한 특혜를 제한하고, 민간 발전소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한전의 이익 규모는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 기술 개발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우리 발전 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알기에, 수명이 다한 노후 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애틋하게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고 험난하다. 그간 전력 산업의 파행으로부터 이득을 취해 온 자들과 그 부역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새 정부는 변하지 말고, 꺾이지 말고, 중단 없는 전진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우리 발전 노동자들 또한 현장 실무와 전력 산업 구조 개편 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때로는 내부 고발자로서 때로는 정책 조언자로서 올바른 길에 함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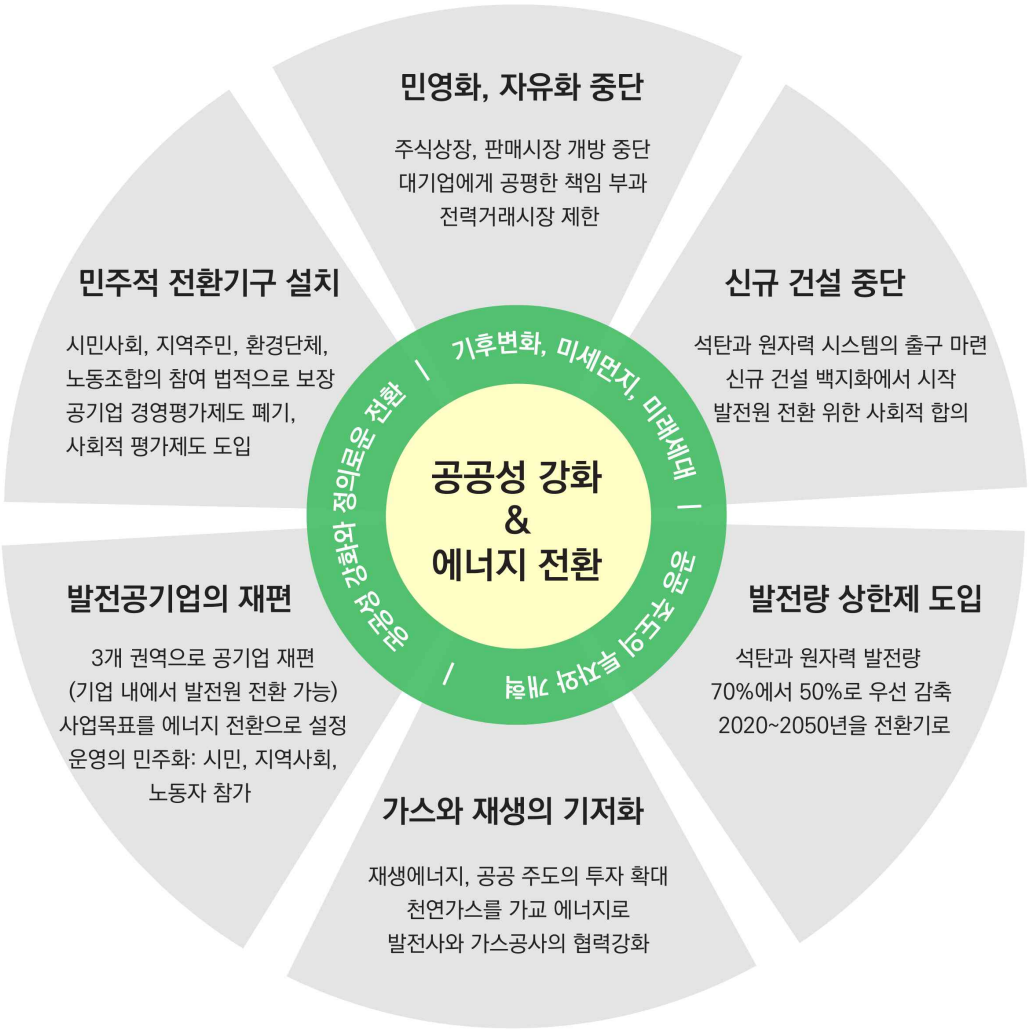
2017년 5월 1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공공성 강화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 공기업 재편

공공성 강화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취지와 요구

■ 제목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 핵심요구

1) 정부는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실시하라
2)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3)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를 구성하라.

■ 배경과 취지

파국적인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과학자들은 전 지구적 기온 상승 1.5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 남은 시간이 불과 10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세계의 주요도시들이 더는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지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과학자들의 우려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상이변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국도 갈수록 변덕스러워지는 폭염과 한파, 사라져가는 장마철과 사계절의 구분이 이미 우리가 기후변화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후위기의 진실을 말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영국에서는 “멸종저항”이라는 대중조직이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서라도 사람들에게 기후위기를 직시하라고 주장하며 도로와 박물관을 점거했다. 스웨덴의 16세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가 시작한 “기후 학교 파업” 시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고, 지난 봄부터 한국의 청소년들도 함께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토지의 종말(엔데 겔랜데)”이라는 단체가 석탄 광산과 철도 위에서 시위 벌이고 있다. 이들의 행동이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상황이 급진적인 것이다.
과학자들의 경고와 기상이변 그리고 대중의 기후행동에 세계의 정부들도 하나 둘 반응을 시작하고 있다. 올해 들어 영국, 프랑스, 캐나다, 아일랜드 등 10여개 국가와 뉴욕을 비롯한 900여개의 지방정부들이 비상선언을 실시하고, 많은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법률로 만들고,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탈핵, 탈석탄”이라는 말뿐이다. 오히려 석탄발전은 늘고 있고, 유류세 인하로로 유류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에너지 부문뿐만 아니라, 노동, 인권, 보건의료, 농업, 식품, 교통, 건물, 복지, 수자원, 생태계 등 모든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와 실천으로 확대되기는커녕, 오히려 “기후변화”라는 말 자체가 정치에서 사라진 상황이다.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기 꺼리는 정부와 여당, 미래에 대해 어떤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은 보수 야당, 보수 언론, 그리고 기득권 세력 사이의 이전투구는 기후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봉쇄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서 낙제점을 받고 급기야 ‘기후악당’으로 지목된 한국의 현 위치를 뼈아프게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불변의 가치로 내세우며 기후위기에 대한 진정성있는 인식과 대응을 회피해 온 역대 정부와 현 정부의 자세부터 통렬히 반성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이제 우리 시민사회 주체들부터 비상한 각오로 나서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누구보다 먼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 나섰지만, 기후위기는 그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 해결도 그들만의 책임일 수 없다. 지난 여름 폭염 속에 어이없게 스러진 대학교 청소노동자와 극한적 온도에서 일을 해야 했던 건설 노동자, 배달 노동자들, 해가 다르게 작황과 재배 환경의 급변을 경험하는 농민들, 과도한 육식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것을 염려하는 채식 단체들, 그리고 지금의 기후 위기를 염려하고 분노하는 많은 시민들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생존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할 때다. 정부, 국회, 기업, 언론, 지자체, 지방의회 등 기후위기를 심화하고 그 해결을 외면하는 모든 권력을 향해 기후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항의해야 한다. 이제 기후침묵은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해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는 단지 몇몇 말뿐인 약속이나 기술적인 해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기후위기 자체가 현대 자본주의의 무분별한 이윤동기가 더욱 많은 화석연료 소비를 유도하여 초래된 대표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는 자신을 대변하고 지킬 수단을 갖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 집단과 그룹들에게 가장 큰 희생과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후위기가 체제의 문제라는 인식을 함께 하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위기의 심화를 가져온 국가와 산업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기후위기의 해결은 ‘기후 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입각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해야 함을 주장한다.

우리는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이 사회와 생태계의 파국을 손 놓고 바라볼 수 없다. 오는 9월, 전 세계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거리로 나올 예정이다. 9월 23일 뉴욕에서 개최될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앞서 각국 지도자들이 기후 위기의 현실을 직면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번 행동은 재앙의 문턱까지 다가온 기후 위기를 조직적으로 외면하면서 대량의 화석연료를 태우는 경제 구조를 유지하려는 정부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게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행동은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소비에 근거한 경제성장을 강요하는 시스템을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한성장과 무한소비가 아닌, 정의와 안전의 가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변화시켜나가겠다는 다짐과 선언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기후위기에 맞선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지난 7월 23일, 촉박한 일정의 제안에

도, 우선 각계 각층의 시민과 단체들이 모여 기후행동을 진행하기로 결의하면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이제 9월 기후행동에 나서며 우리는 다음의 내용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 요구들은 이 땅의 시민들과 지구 위 수많은 생명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과제임을 밝힌다.

■ 우리의 요구(세부 요구)

1. 정부는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직시하라

- IPCC를 비롯하여 전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IPCC는 기후변화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파리협약에 따른 2도(혹은 1.5도) 목표를 지킬 수 있는 탄소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런 분석도 보수적으로 평가되며, 유엔 사무총장조차 최근 아부다비 기후회의에서 기후위기의 진행이 예상한 것보다 심각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향후 10년 안에 급진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을 넘어서 가뭄과 홍수, 태풍과 산불, 식량위기와 물부족, 생태계붕괴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한국은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며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국가 중 하나다.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 안팎에 있는 경제 강국이기도 하다. 그만큼 현재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상당하다. 하지만 한국은 2030년에 5억 3천만톤까지 감축하겠다는 안이한 감축 목표만 내놓고 있어,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그 목표치를 수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전 정부가 승인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 언론과 교육 어디서도 기후위기의 실상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침묵으로 외면하고 있다.

2. 정부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시행하고 국가적 대응에 나서라.

- 현재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들이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에 나섰으며, 10여개 국가와 900여개 지방정부들도 비상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뉴욕시의 <기후동원법>처럼, 가용 가능한 모든 차원을 동원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나서는 것이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정한 유엔 사무총장은 다가오는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기후행동정상회담(Climate Action Summit)'을 소집하고, 국가 정상들에게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 정부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실시하고, 모든 행정력과 재정 능력을 총동원하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9월 23일 유엔 기후행동정상회담에 참석하여 한국의 의지를 보이고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호소해야 한다.

3. 정부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를 수립하고,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

- IPCC는 최근 발표한 1.5도 특별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순배출

량을 제로(0)로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에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들은 기존 계획을 강화하여 2050년 배출제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입법화하고 있다.

- 정부는 2020년 상반기까지 2050년 배출제로 목표를 천명하고 이를 위한 달성할 수 있는 방안 연구에 돌입해야 한다.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한국의 탄소예산을 산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 발전, 교통, 건물 등 사회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 석탄발전 중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내연기관차 중지 등을 배출제로 목표에 부합하도록 빠른 시일내에 적극 추진해야 한다.

4. 정부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 위기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정의로우며 합리적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지켜야 한다.

- 정부는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다배출자에게 더욱 많은 감축(비용) 책임을 배분하고, 빈곤층과 소농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피해는 보상하고 예방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위기의 불평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후정의 원칙).

- 화석연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지역 사회가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받은 충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 전환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기술공학적 해결책의 도입과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고, 핵발전의 이용을 정당화(합리화)해서는 안된다.

5.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를 설치하라.

- 현재 정부의 각 부처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있으며, 청와대와 국회는 개발주의 시대의 낡은 국민 여론에 매달려 기후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범국가기구로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름과 다르게, 미세먼지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다.

-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개방적이며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를 설치하라. 이 기구를 통해서 2050 배출제로 목표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와 기존 계획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라.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계획

■ 소개

전세계 시민사회는 9.23 유엔기후정상회의에 맞춰 진행되는 각국 지도자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음. 9.20-27 국제공동행동 주간에 맞춰 한국에서도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기후대응에 나서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사회 각 부문의 전환을 촉구하는 행동을 진행하기로 함. 이를 위해 각계 각층의 단체와 개인들로 <기후위기비상행동>을 결성하여, 9.21 대규모 집회와 행진, 9.27 청소년 파업에 연대하는 집중행동을 계획하고 있음.

■ 행동계획

(*세부 프로그램은 추후 공지,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가.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개요
- 일시: 2019년 9월 21일 (토) 오후 3시~6시30분
- 장소: 서울 대학로, 전국 주요 거점
- 프로그램(서울): 사전 행사(오후1~3시: 부스 및 사전집회 등), 본 집회 (대학로, 오후 3시~4시), 평화 행진(대학로~종각),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단 퍼포먼스 (오후 4시30분~6시)
- 거점지역 공동 조직: 충청, 대전, 전북, 경남, 제주 등

나. 9.27 SCHOOL STRIKE: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
- 일시: 2019.09.27.(금) 10:00~17:00 / 장소: 광화문 광장
- 프로그램
  10:00~17:00 모든 우리의 문화로, 기후위기 퍼레이드
  14:00~16:00 우리의 목소리로 (청소년 자유발언 및 기자회견)
  16:00~17:00 공동 집중행동(혼란과 눕기, 행진하기)

다. 사전 행동
- 부문별 조직, 선언: 청소년, 노동, 보건, 종교, 농업, 환경, 생협 등 각계각층
- 대중 자료 보급: 시민인식증진과 교육을 위한 자료 생산과 보급
- 시민모금: 온라인 모금 진행 및 개인 후원 모금
- 온라인행동: 웹사이트(https://www.climate-strike.kr) 운영, 온라인 캠페인,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 정책: 국회의원 정책 질의

- 언론/홍보: 연속기고, 기획보도 등
- 국제연대: 글로벌 기후 파업 네트워크와 정보 공유, 교류
- 단체별 행동: 청와대 앞 1인 시위, 추석 귀향길 캠페인, 영화 상영회, 강연회 퍼포먼스 등

■ 부문/단체별 행사 일정

행사명	주최	일시	장소
청와대 앞 1인 시위	기후위기 비상행동	매일	청와대 분수대
기후위기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 및 회의	기후위기 비상행동	9.4 13:00	프란치스코교육회관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9.5 14:00	프란치스코교육회관
기후 비상사태 노동조합운동의 대응 토론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9.5 15:00	민주노총 대회의실
기후위기는 삶을 어떻게 위협하는가 강연회	인권재단사람, 녹색연합	9.5 19:30	인권중심사랑 2층
기후위기 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6 15:00	프레스센터
청소년 기후행동 뽕!	청소년 기후행동	9.7 / 9.14	광화문
기후위기 플래시몹 다이-인	녹색당	9.7 14:00	광화문광장
기후위기 자전거 행동	서울환경운동연합	9.7 15:00	뚝섬한강공원 출발
기후위기 일요행동	녹색당	매주 일요일	세종문화회관 앞
귀향길 기후행동 참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9.11	서울역
기후위기와 건강의 위기	건강과대안	9.18 19:00	빅스터디 4층(종각)
제17차 기후변화 씨네톡 상영회	ICE네트워크	9.19	프란치스코교육회관
삼척석탄발전소 백지화 퍼포먼스	녹색연합	9.20	미정
기후위기 비상행동 행진	기후위기 비상행동	9.21 13:00	대학로
UN 기후행동 정상회의 진단 긴급토론회	기후위기 비상행동	9.24	미정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	청소년 기후행동	9.27	광화문
이색달리기 Earth & Run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9.28	평화누리공원